

홍콩 항쟁 지지하라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방한 강연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6~8면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4면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11면

철도 파업
철도 임금·조건
개선하라

12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 있다

5면

홍콩 항쟁
관련 기사들

2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볼리비아 쿠데타 -
신자유주의의 복수

9면

한국에서 홍콩 항쟁 지지와 연대가 커지고 있다

김지윤

한국에서 홍콩 항쟁 연대 활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선 대학가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최근 서울 대학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홍콩 항쟁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에서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홍콩 항쟁 지지 대자보를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이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양대 등에선 정의당 학생들의 대자보도 훼손됐다. 일부에선 대치도 했다.

그러나 언론들이 대자보 훼손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한국인 학생들의 홍콩 항쟁 지지 활동이 알려지고, 지지 여론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인 학생들의 홍콩 항쟁 연대 홍보전은 대학마다 호응이 커졌고, 지지 활동에 고무된 홍콩 유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도 이를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그중 가장 집중적으로 화제가 된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이 11월 13일에 연 포럼 ‘홍콩 민주항쟁 왜 지지해야 하는가’에는 200여 명이 몰렸다. 포럼이 끝난 직후에는 즉석 지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이 대자보 훼손과 방해에 굴하지 않고 항쟁 지지를 굳건히 한 것이 지지 분위기의 구실을 형성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11월 19일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비롯한 학생·청년 단체들이 공동으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홍콩 항쟁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의 방해에도 참가자들은 오히려 명동 일대를 행진하며 시진핑 정부의 폭력 진압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연대 담아 지지”

제국주의(미·중) 간 진영논리가 강해서 그동안 진보와 좌파에서 (노동자연대를 제외하면) 항쟁 지지 목소리를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진영논리의 착각과 달리 서방 강대국들은 홍콩 항쟁

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계급 조직들이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국제 연대 정신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중 투쟁을 지지하고 중국의 가짜 ‘사회주의’에 항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반갑게도, 11월 18일 노동조합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콩 시위대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25일에는 광주 19곳 단체가 광주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정부의 폭력 진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980년 광주의 유혈낭자한 국가 폭력을 생생히 기억하는 광주 활동가들은 홍콩 시위대에 큰 일체감을 보이며 “강력한 연대”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광주시장 나경채 위원장은 “광주시민들의 홍콩 민주화 투쟁 지지 기자회견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희망을 드러냈다.

진보 정당들의 입장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홍콩에 지지 연대 방문을 다녀왔다. 그는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으로 ‘땅콩 회항’ 사건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만행을 알린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는 홍콩 방문 소식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하면서, 당직자로서 홍콩 지지 방문에 정의당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당내 직책을 맡은 상황에서 저의 행보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개인적으로나마 홍콩 시위에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양해해 준 정의당에 감사하다.” 이는 정의당 지도부가 당내 활동가들과 달리 “국제사회 외교관계를 고려”해 시위 지지를 회피해 왔음을 보여 준다.



명동에 울려 퍼진 “홍콩 항쟁 지지” 11월 19일 학생·청년들이 중국대사관 앞 항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월 19일 페이스북에서 홍콩 항쟁을 “자치권 보장 시위”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의 삶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내 정당 대표 중 처음으로 시진핑 정부와 홍콩 당국에 무력적 시위 진압 중단을 촉구하며(“홍콩 사태의 평화적 해결”) 시위에 지지를 밝힌 것이다.

11월 20일에는 홍콩 항쟁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던 민중당은 인권위원회 명의로 시진핑 정부의 폭력 진압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아직 운동에 대한 분명한 지지 표명은 유보했다.

종합하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콩 항쟁 연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특히 청년세대) 홍콩 항쟁에 대한 지지 정서가 광범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진보 정당에서도 청년 쪽이 먼저 지지 목소리를 낸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조국 논란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청년들의 정서가 각 정당들의 공식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에서의 지지 활동 소식

11월 18일 이화여대에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과 홍콩 유학생들이 홍콩 항쟁 지지 홍보전을 열었다. 이 홍보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 정소·경비·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도 참가했다. 이화여대 정문은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매우 많은 곳이다.

같은 날 신촌 연세대에서도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학생들’,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등과 유학생들이 기자회견과 학내 행진을 벌였다.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려고 설치된 ‘레논벽’은 지지 글들로 가득찼다. 연세대 학생들은 11월 20일부터 학내 홍보전을 시작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청소년노동자들의 지지 덕분에 학생들이 학내에 홍콩 항쟁 지지 팻말을 부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한양대, 세종대, 동국대, 서울

대에서는 정의당 청년당원 모임 ‘모멘텀’ 회원들이 홍콩 항쟁을 지지하며 일각의 대자보 훼손에도 항의하고 있다.

한국외대에서는 학교 당국이 대자보를 무단 철거하고 홍콩 관련 입장 표명을 금지했다. 애초 지지 대자보를 일부 중국인 유학생이 훼손한 것이므로 양측 다 입장을 내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 행위일 뿐 아니라, 사실상 시진핑 정부를 편드는 행위다. 11월 21일 학내 학생 단체들이 모여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를 시작했다.

전남대에서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학생이 항쟁 지지 활동을 시작했고, 덕성여대와 인하대에서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이 대자보 부착에 이어 학내에서 항쟁 지지를 모으고 있다.

11월 23일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긴급행동’이 열릴 예정이다.

홍콩 항쟁은 분리독립 운동인가?

시진핑 정부와 중국 관영 언론들은 홍콩 항쟁이 홍콩을 중국에서 분립 독립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느 국가도 영토와 국민을 상실하는 일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홍콩 항쟁 탄압을 정당화한다.

서방 언론들도 (중국과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홍콩 항쟁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는 홍콩 청년들이 일으킨 반反중국 시위라고 보도한다. (관련 기사: 서방 지배자들의 위선)

홍콩에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홍콩 항쟁 본부 측이 공식적으

로 내놓은 요구들에 독립 요구는 없다. 지난 9월 홍콩 사회주의자 아우롱위는 새 세대 청년을 비롯한 항쟁 참가자 다수가 홍콩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립이 불가능한 요구라는 점도 홍콩 사람들은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우롱위는 이렇게 덧붙였다. “누군가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배너를 들거나 그 구호를 외치면, 이를 말리려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 11월 10일 본지 기자들을 만난 홍콩 건설노조 활동가인 람슈메이도 이와 같은 일을 시위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중국과 티베트·신장의 관계와는 다르다. 즉, 강한 민족이 다른 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다. 홍콩 인구 대다수는 한족이다.

또한 독립 요구는 홍콩 항쟁에 대한 억압받는 중국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모으는 것을 방해한다. 오늘날 중국 권력자들은 불만에 찬 중국 대중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을 염려한다. 홍콩 항쟁은 독립이 아니라 중국 본토 대중에 한 발 다가서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홍콩의 혁명가들은 말한다.

김영익

“광복홍콩” 구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 홍콩 항쟁 참가자들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를 자주 외친다. 그래서 이것은 홍콩 항쟁을 대표하는 구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처음으로 외친 사람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소위 ‘본토파’ 세력이었다. 이때 “광복홍콩”에는 홍콩이 중국한테서 “광복(해방)”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현지 활동가들은 지금 홍콩 대중이 “광복홍콩”을 홍콩 독립의 의미로 외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설한 홍콩 건설노조활동가 람슈메이는 7월 하순 이후에야 이 구호가 비교적 널리 외쳐졌다고 말했다. 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서다. 즉, 정부가 너

무 흑심하게 항쟁을 탄압하자,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중국의 간섭과 탄압에 맞서 홍콩의 민주와 자치를 허용하라는 촉구 의미로 “광복홍콩”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콩 시위대가 “광복”을 외친다고 해서 그 운동이 분리 독립 운동인 것은 아니다.

물론 한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구호를 먼저 외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홍콩의 “광복”을 외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홍콩 항쟁에 연대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홍콩 운동을 지지하라”, “시진핑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라”, “인민해방군인가, 인민해방군인가” “홍콩 민주항쟁 만세” 등을 외칠 수 있다.

김영익

경찰의 대학 캠퍼스 야만적 침탈에도 홍콩 항쟁 만세!

이원웅

홍콩 당국이 탄압 수위를 높이면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거리낌없이 실탄을 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겨났다.

11월 14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현재 홍콩에서 가장 긴박한 과제는 폭력 난동을 저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며 강경한 탄압을 주문했다. 16일에는 중국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이 홍콩 거리를 청소하는 데에 투입됐다.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미 중문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홍콩 경찰은 18일부터 이공대를 포위하고 학생들을 공격하고 체포했다. 경찰은 음향 대포와 물대포를 쏘고, 학교를 봉쇄해 식량과 생필품 반입을 차단했다. 물대포에 맞아 저체온증에 걸리고,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했다. 경찰이 응급처치요원까지 연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까지 공격하고 연행했다. 학생들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졌다.

정당방위

경찰의 봉쇄 작전과 추위와 굶주림에 못 이긴 많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빠져나왔다. 자진 체포되기도 하고, 밧줄을 몸에 감고 건물에서 내려가거나, 담장을 넘거나, 맨홀로 들어가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11월 20일 현재, 이공대에 끝까지 남아 저항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공대는 경찰의 물리적 공세에 못 이겨 사실상 함락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홍콩 항쟁의 기세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홍콩 시민들은 항쟁의 발단이 된 송환법을 철회시켰으며, 그 후에도 5대 요구 사항을 굽히지 않고 요구하며 꽤 오랫동안 전투를 벌여 왔다.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도심에서는 사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점심 시위’가 벌어졌다. 많은 노동자들이 퇴근 후에 시위에 합류했다. 캠퍼스 침탈 후에도 이런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11월 18일 홍콩고등법원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도입한 마스크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홍콩 대중의 거센 압력으로 홍콩 상충부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물론 다음 날 시진핑 정부는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발표를 했다. 홍콩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중앙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시진핑 정부도 다급하다.

수위가 높아지는 시진핑 정부의 탄압에 직면해 홍콩 항쟁 내에서는 운동의 진로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극심한 경찰 폭력과 당국이 퍼뜨리는 온갖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홍콩 대중의 전투성은 실로 대단하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집단적 행동을 벌여야 한다. 이미 홍콩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총파업을 시도함으로써 잠재력을 보인 바 있다. 이런 행동을 즉시 해야 한다.



드러나는 서방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의 위선

홍콩에서 충돌이 치열해지면서 서방 정치인들이 시위대와 경찰의 폭력을 동렬에 놓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어느 측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 하고 말했고,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양측이 모두 진정하고 자제하라” 하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홍콩 시위대 일부가 극단적인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시위대를 비난했다. 저항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의 처지를 고려해 항쟁 지지를 표명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서방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시위대의 폭력과 경찰 폭력을 똑같이 문제 삼아, 홍콩이 혼돈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서방 언론들은 홍콩 항쟁을 독립 요구 시위로 왜곡하는 데에서도 중국 관영 언론과 마찬가지로, 다만 동기가 다

를 뿐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홍콩과 중국 본토의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고 홍콩 운동 내부를 이간질하려 하는 반면, 서방 언론들은 반중(反中)적 성격을 부각해 새로 부상하는 경쟁국 중국의 위신을 깎아 내리려 한다.

서방 언론들은 시진핑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리독립 주장을 은근히 뒤섞고, 홍콩 분리주의자들을 부각해 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시위를 헐뜯는 데에도 편리한 핑계가 됐다.

분리주의 부각

서방 지배자들과 그들의 언론은 홍콩 항쟁을 결코 일관되게 지지할 수 없다. 지지를 표한다 해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항쟁을 이용하려 할 뿐이다. 9월 홍콩 운동의 자유주의적 유명 인사 조슈아 웅이 독일 외무장관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독일은 인민해방군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예정

대로 진행하려 한다. 트럼프도 이미 홍콩 항쟁을 냉소적으로 미·중 갈등에 이용한 바 있다.

11월 20일 미국 상원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며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진짜로 홍콩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법은 미국의 적성국 제재(예컨대 이란이나 북한 제재)에 홍콩이 동참하는지 평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라고 요구하는 법이다. 이 법은 홍콩으로 망명 간 미국인을 “송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이처럼, 서방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은 억압받는 홍콩 대중의 친구가 아니다. 서방 강대국의 도움이 홍콩 항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주의가 득이 되는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 노동자들만이 일관되게 홍콩 항쟁을 지지할 수 있다.

홍콩 항쟁의 배경과 역사

이정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중국 전공자

홍콩 식민 통치 시절에 저항을 억눌렀던 영국 정부가 홍콩 항쟁을 탄압하는 시진핑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은 분명 불쌍스럽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홍콩 반환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에서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불쌍스럽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식민통치 시절에 경찰력을 잘 훈련시킨 영국에 고마워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1997년 홍콩 반환 때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5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일국양제는 중국과 영국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타협이었다.

반환 이후 홍콩인들이 중국·홍콩 정부에 대한 이유는 주로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를 스스로 위반하며 홍콩의 민주적 권

리를 침해한 것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친자본 정책들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살인적인 주거비 폭등,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 내에서 홍콩 경제의 상대적 비중 축소, 중국 자본의 대거 홍콩 진출로 인한 일자리 경쟁 등의 경제적 요인들이 홍콩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2003년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불간섭에서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한 시점이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국가보안법을 넣으려다 50만 명이 참가한 저항에 직면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홍콩을 담당하면서 홍콩의 주요한 사항마다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기본법을 최종 해석하는 권한을 홍콩 사법부가 아니라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산하의 상무위원회에게 넘겨줌으로써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 그리고 홍콩의 민주적 권리를 야금야금 침해했다.

2012년 중국 정부는 홍콩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교육을 도입하려 했지만 학생들이 주도해 이 시도를 좌절시켰다.

이번 투쟁 전에 홍콩인들의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는 2014년 우산운동이다. 특히 홍콩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79일간 홍콩섬의 행정 중심지인 센트럴을 점령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투쟁이 촉발된 배경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진정한 보통선거로 하지 않고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로 출마 자격을 제한하려는 중국 정부의 개입 때문이었다.

홍콩인들은 입법회와 행정장관을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속적

으로 나타냈다. 2012년 중국 정부는 2017년에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4년 8월 전인대는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하되, 선거인단의 과반 동의를 얻는 애국 친중인사 2~3명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우산운동은 패배로 막을 내렸지만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 하고 끝난 것은 아니었다. 2019년 행정장관 캐리 람이 범죄인인도조례(일명 송환법)를 개정하겠다고 천명했을 때 2014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송환법에 반대했다.

홍콩인 대다수가 이번 송환법 반대 투쟁을 지지했다. 20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대중적 반대 때문에 캐리 람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지배자들은 홍콩의 거대한 투쟁이 인근의 선전과 광저우 등지의 노동자들에게 확산될

까 봐 전전긍긍한다. 최근 홍콩 시위대에 대한 강경 탄압에는 홍콩 투쟁이 중국 내륙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홍콩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캐리 람과 시진핑이 원하는 ‘질서’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침사추이, 센트럴, 코즈웨이베이 등지에서는 시위대를 응원하는 행동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콩에서 다음 전투는 구의원 선거를 두고 벌어질 듯하다. 11월 24일로 예정된 선거에서 친중과 후보를 대거 낙선시키고 홍콩 항쟁을 지지하는 진보 후보가 크게 약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홍콩과 본토 사람들이 단결해 공동의 적(시진핑·캐리 람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홍콩은 금융 중심지이자 소멸 천국이기도 하지만 중국 전역에 혁명을 촉발시킨 투쟁들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김문성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간다”는 속담에 딱 어울리는 결과다.

무엇보다 국정 전반의 기조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기회나 방식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때문에 자유 토론 방식은 소통 이미지만 대중에게 전하는 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생방송 후에, 틀게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감하고 정부에게 불리한 질문을 할 패널들은 애초에 배제됐음이 당사자들에게 의해 알려졌다.

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불안정 때문에 우경화하면서도 여전히 진보 염원층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처지가 어제 대화에서도 드러났다.

노동 개악을 포장함

문재인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도 보완하되 계속 추진해서 “저녁 있는 삶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만 준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주는 척했다가 빼앗은 대표적인 항목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 측만 아니라 정부 측도 강하게 인상 억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오르지 않거나 줄게 만들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악하려



틀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처럼 정부에 불리한 질문을 할 패널은 배제됐고, 제주 강정 기지 문제에 관한 답변은 사실과도 달랐다

한다.

결국 문재인은 자신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 주범 구실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감추고는, 정부 기조가 여전히 “노동존중”이며 노동자들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문제 집단인 듯이 말했다.

한편, 문재인은 (고용 인원) 50인에 가까운 중소기업에는 탄력근로제나 유연근무제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계속 추진 중이라는 말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개악 법안들은 그 자체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악을 받아들

이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사소한 양보가 아니다.

이렇듯 말만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과 왜곡된 답변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문재인 진정 노동자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은 애초에 패널 구성에서 배제하고, 한 번 대답한 것에 대한 추가 질문 기회는 없었다.

지소미아, 모순된 답변

이번 주에 종료 예정된 지소미아에 관한 답변도 관심을 끌었다.

8월에 항일, 죽창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는 11월 들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명분만이라도 달라는 식으로 일본 정부에 저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신뢰하지 못한다며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전 요구 없이 수출 통제를 강행했다”며,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결론을 내어 우파를 달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리의 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 나갈 것이다.”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양효영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회피한다.

게다가 임기가 절반이나 지나도록 문재인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한 바 없다.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을 존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유엔의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안 22가지도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악법인 군형법 92조의6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기총 총회에 가서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야만적인 박영선을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앉혔다.

“사회적 합의” 운운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우파의 존재를 이유로 차별 개선 조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팬스레 우파들에게 책 잡힐 일은 애당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과

달리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 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출신이고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요하게 언급해 성소수자·인권 NGO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9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는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추진은 거론하지 말라고 해 인권위 직원들과 NGO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정부 기관의 일부로서) 조국 문제로 정부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를 더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영애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성소수자와 진보진영의 사기를 꺾고 혐오 세력의 기만 살려 줄 뿐이다.

최근 인권위가 김문수 전 도지사의 동성애 혐오 발언(“동성애는 담배보다 해롭다”)에 대해 “구체적 피해”가 없다며 물린 것도 성소수자들의 실망을 낳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의 혼인 인정 진정도 물리쳤다.

성소수자 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인권위에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 관련 기사 10면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온라인 기사]
임금 억제와 실적 경쟁을 낳은
KT 성과연봉제 10년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트위터
@wspaper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이현주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바깥의 미군 활동 지원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인상에 동의하지 않자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방위비 협상이 중간에 이렇게 결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지대한 관심사임을 보여 준다.

미국은 여전히 한동안 세계 최강국일 것이다. 그러나 최전성기와 비교해 경제력 우위의 상대적 쇠퇴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고, 압도적 군사력 우위도 점차 경쟁자들의 부상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중국) 그래서 미국에게 유럽,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자국의 패권을 유지·관리하는 일은 갈수록 힘에 부치는 일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라 왔다. 중국 포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인도를 편입시키면서 이들이 군사적 역할뿐 아니라 비용도 더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한일 군사 협력 강화도 마찬가지다.

특히 트럼프는 “부자 나라”인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를 위해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고 “미국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해 왔다.

문제는 미국이 동맹에 대한 요구에 걸맞는 대가를 제공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요구가 미국의 “강요”보다는 요청이고 빌어먹기(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다는 뜻)에 가깝게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이라는 문재인 2017년 11월 문재인은 트럼프와 함께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해 한국의 기여를 과시했다

보이는 이유다. 미국의 무리한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요구는 미군이 세계의 ‘경찰’에서 세계의 ‘용병’으로 바뀐 것처럼 인상을 준다.

미국의 행태가 강력함보다는 상대적 약화를 반영하는 듯 보이는 이유다. 미국의 동맹 간에 지소미아 갈등이 벌어졌는데도 여태 조정을 못하는 것도 달라진 역관계의 반영일 것이다. 미국은 내년에 일본·독일,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등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과의 협상 결과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협상은 미국에게 사소한 일이 아니다.

평택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국의 패권 유지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요구에 타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무리한 인상을 반대할 뿐 인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에 반대한 대학생들을 네 명이나 구속 수감한 것도 정부의 타협 태세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 또는 삭감을 주장하는 운동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강요”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몇몇하고 당당한 대처를 주문하는 견해가 흔하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한미동맹에 적극 협조해 온 한국 정부의 문제를 가려 한국 정부도 반제국주의 운동이 맞서야 할 핵심 대상임을 놓치게 만든다. 또한 이런 논리는 강대국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국민적 단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귀결되기 쉽다. 가령 정의당은 미국에 맞선 “조당적 대응”을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끌려다녀서가 아니라 자체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한국 지배계급은 한미동맹의 우산 속에서 자체의 이해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서 한국 기업이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더 수월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적극 뛰어들었던 것이고 평택 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나선 것이다. 2017년 11월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한 트럼프를 맞이하며 문재인은 한국이 기지 전체 부지 비용과 건설비 100억 달러(약 12조 원) 중 92퍼센트를 지원했다는 점을 자랑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군기지 건설·유지 지원, 사드 도입과 첨단 무기 도입 등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협조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일방적 강요에 맞선 국민적 단결과 자주국방을 추구하자는 식의 포퓰리즘적 전망은 최근 우파의 주장에도 날카롭게 맞서기가 어렵다.

일부 우파는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지원금 과다 인상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본다. 한미동맹을 신봉하는 이들이 미국의 인상 요구를 비판하면서 내놓는 대안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다. 최근 <조선일보>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에]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好機)로 삼아” 핵잠수함 도입을

언어내자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길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자주국방론으로는 이런 우파의 공세를 반박하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주한미군 지원금 문제는 인상 폭만 이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평범한 한국인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패권을 위해 주둔한다.

그래서 주한미군 자체가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을 부르는 요인의 하나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한 한반도 바깥에서 미국이 벌이는 강패짓을 위해서도 비용을 대라고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물가인상을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문제 제기일 뿐이다.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며 미국 제국주의를 폭로하고 또 이에 협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일 군사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

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

방한한 트럼프 정부 관료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가 대중국 견제용임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공들여 결국 박근혜 정권 때 체결한 지

소미아가 자칫 종료될 상황이다.

미국 외교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는 트럼프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 간의 유대가 망가진다면 중국 정부가 역내 힘의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더 대담하게 나설 수 있다.”

11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와의 타협을 모색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포퓰리즘적 대처의 일환이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거듭 일본에 타협의 신호

를 보냈다. 일왕 즉위식에 총리 이낙연을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본이 매우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든 듯하다. 일본 정부가 종료 결정을 번복할 어떠한 명분도 한국에 주지 않는 상황에서 종료 결정 번복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차선책을 추구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 한미동맹보다 한일동맹은 더 민감한 문제다. 이명박이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들통

나 폐기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로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타협의 여지도 적극 열어 두고 있다. 최근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끝까지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일 동맹을 유지할 꿈수들도 나올 수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안이나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설령 이번엔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해도, 문재인 정부도 한미일 동맹을 중시해 왔다는 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인도양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올 가을에도 일본 해군과 해상 선박 검색 훈련을 합동으로 했다. 11월 19일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은 해 나갈 것이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사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본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5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정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사진 2 천정록

오늘날 세계를 보면, 더 나은 세상을 쟁취해 온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뚜렷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은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아마존 밀림이 지난 며칠 동안 화재에 휩싸인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결코 자연 재해가 아닙니다. 아마존 밀림에서는 매년 이맘때 화재가 나지만, 올해는 이전보다 세 배나 많이 났습니다. 왜냐구요?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자신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준 자본가들의 꼬베를 풀어서, 이들이 마음껏 밀림을 깎아 목장, 농장, 광산으로 만들고 이윤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원주민의 삶은 뒤틀전으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이 더 위험로워졌습니다.

어제 우리는 극우와 인종차별의 위협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판권 기사: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 유럽의 새 극우와 파시즘' 사진 4(아래)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단체인 카사파운드가 거리에서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진 2(오른쪽 위)는 그리스의 어떤 섬에 상륙한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새 우파 정부는 빈곤과 전쟁을 피해 온 난민들을 지금보다 훨씬 가혹하게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상과 동시에 저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8월 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아마존 밀림 화재와 보우소나루 정부에 항의해 벌어진 거대한 시위는 환경 문제로 브라질에서 벌어진 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집회 전에도 아마존 원주민의 권리를 지지하는 집회, 정부의 교육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6(8면 아래 왼쪽)은 올해 초 영국 중고등학생들이 벌인 기후변화 반대 시위를 찍은 것입니다. 이 운동은 거리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매일 한가운데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빨이 있네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후 말고 체제를 바꿔라', '혁명만이 해법이다'. 새롭고 거대한 이 운동은 세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지난해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여성 노동자 2억 명이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법 개혁, 임금과 노동조건 공적에 맞서 파업했습니다. 이런 투쟁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을 때, 베를리에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벽에 붙은 '베를리에(Berliet)'라는 글자를 '리베르테(liberté)'[자유]로 고쳐 달았죠.

곳에서 노동계급이 반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작은 투쟁도 때때로 더 나은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사진 3(오른쪽 아래) 속 남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9일 동안 벌어진 광원 파업 참가자들입니다. 이들은 랑세스 사(社)의 크로모광 광도를 9일 동안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자의 성화봉과 구조조정에 맞서 단결해 9일 동안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후 사측은 성화봉을 저지른 관리자를 내쫓았고 해고 노동자들은 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을 차별에 맞선 투쟁과 연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희망이 절망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거나 한두 가지 작은 변화를 이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계의 막대한 부를 어디에 쓸지를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세상, 누구나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리자

우리 편이 거의 승리할 뻔하다가 못한 최근 사례를 두 개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투쟁의 잠재력을 살피고, 다음 번에 확실히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사례는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입니다. 경제 위기가 그리스를 강타한 2010년에 그리스인들은 2008~2009년에 파산한 그리스 은행들과 은행가들의 막대한 빚을 갚으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대중의 생활 수준을 공격한 결과 그리스인들의 삶의 질이 60~7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공공 의료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연금도 삭감했습니다. 노동계급이 혹독하게 공격받아 사망률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은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2010~2015년 동안 강력한 학생운동이 벌어지고, 연금 수급자들이 큰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서른두 차례나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격할 태세를 보여 줬습니다. 시리자는 이런 분위기의 정치적 초점이 됐습니



사진 1 수단 혁명의 아이콘이 된 알라 실라. 수단 민중은 30년 동안 수단을 지배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를 쫓아냈다

다. 2015년 총선에서 그리스 사회당(PASOK)이 참패하고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총리로 당선됐습니다.

사진 7은 선거 승리에 기뻐하는 치프라스의 모습입니다. 치프라스만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사람들은 이제 긴축이 끝나리라 기대했습니다. 시리자는 민중의 삶을 파탄 낸 긴축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시리자 집권을 전 환절점으로 꼽직한 긴축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리자는 체제를 무너뜨리기 보다는 체제 내에서 변화를 이루고자 했고 기존 체제의 선출되지 않은 강력한 세력, 즉 은행, 기업, 국제 금융 기구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모두 시리자가 조금이라도 긴

축을 완화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세 기구를 묶어 '트로이카'라고 하는데, 당시 트로이카의 수장인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가 경제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투표하든 같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시리자 정부는 유럽 자본가 기구의 권력자들과 대화하고 협상했습니다. 시리자와의 협상 기간 내내 그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긴축을 시행하라'. 그리스인들은 그러려 하지 않았습다.

치프라스는 긴축안을 수용할지를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그러면서 치프라스는 그리스인들에게 트로이카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긴축안을 거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인의 61퍼센트가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의 긴축안에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시리자 정부에 임박했던 인사들의 회고록에서 이후 드러났다면, 치프라스는 사실 긴축안 찬성 표결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즉 긴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긴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가 긴축 거부였는데도 시리자 정부는 7일만에 부자들이 요구한 긴축안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치프라스 개인이 특별히 부패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리자 같은 부류의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파 정부가 선거로 집권하더라도 은행 · 공장 · 사무실 · 광산을 지배하는 자본가들의 권력을 빼앗아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력은 여전히 자본가의 손에 있고, 자본가들은 막강한 그 권력으로 선출된 정부를 압박합니다.

당시 시리자가 승리할 유일한 길은 '빚을 갚는 데에 돈을 쓰지 않겠다. 은행을 점수하겠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다른 나라들에게 긴축에 맞선 우리 투쟁을 지지하고 자기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하라고 호소한다'고 선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스 민중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진 5(8면 위)는 당시 총파업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긴축을 시작했던 보수당 정부가 아니라 시리자 정부에 맞선 총파업이었습니다.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리자가 이토록 사람들을 실망시

켰기 때문에 보수당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이제 금융 기구들은 그리스인들에게 2060년까지 부채를 상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험은 의회에는 진정한 권력이 없다는 혁명가들의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스에서 있었던 투쟁이 허사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에서 쟁취한 모든 것이 이 투쟁의 성과였습니다. 요즘에도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 사례는 선거로 얻는 승리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수단

둘째 사례는 북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수단은 이 시대에도 혁명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초기처럼 수단 항쟁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수단 항쟁은 2018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이 항쟁은 빵[팔라벨]과 생필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30년 동안 수단을 잔혹하게 통치한 알바시르에게 항거하는 정치적 투쟁으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알제리에서 독재자 부테플리카에 맞서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알제리 항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엘시시의 반혁명에 짓밟힌 이집트에서 2011년 혁명 때 울려 퍼진 구호 "민중은 정권 타도를 원한다"가 수단뿐 아니라 알제리,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 시위가 계속되면서 여러 명이 총에 맞았지만 항쟁은 멈추지 않았습니

다.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된 항쟁이 정치 투쟁으로 확대됐고, 이는 다시 경제 투쟁으로 확산됐습니다. 점차 넓은 층의 사람들이 항쟁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쟁은 정부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1(위)에 나온 여성은 알라 실라입니다. 알라 실라는 아마 수단 항쟁의 가장 유명한 아이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쟁은 단지 거리 시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 교사, 의사 등 여러 부문이 파업에 나섰고 정부에 대한 압력이 커졌습니다.

4월에 수단 수도 하르툼 소재 국방부 청사 앞, 포트수단 등지에 있는 군사 기지 앞에서 광장 점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수천 명 수준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국방부 청사 앞 광장을 점거했습니다.

마침내 4월 11일, 30년 동안 수단을 지배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퇴진했습니다. 군부는 알바시르에게 당선을 지킬 수 없다, 체제의 나머지를 살리려면 당신을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쟁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연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묘사하고 싶습니다. 대중이 스스로 자기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의 분위기를 힘껏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차르를 타도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상주의에 도취된 단명한 1871년 파



사진 8 거대한 수중 무덤이 된 지중해



사진 3 여성과 남성노동자들이 단결해 승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원 파업

리 코원이 어땠는지를 상상하기란 어렵겠지만, 아마 2019년 4월의 하르툼 같았을 것이다."

혁명이 역사책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기업주를 대변하는 우파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정했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셜리스트 워커>가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의 말을 꽤 길게 전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년 혁명가들이 완전히 장악한 수도 하르툼 도심으로 걸어 들어가면, 변화를 알 수 있다.

"자원 활동가들이 몇 미터마다 검문소를 설치해 무기가 반입되지 않게 한다.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검사한다.

"자원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약국을 운영한다. 약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람들이 투쟁 자금을 모금한다. 돈가방이 도로변에 있어서 집에 갈 차비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돈을 꺼내 간다.

"기부 물품 차량이 아니면 진입할 수 없다. 예외는 없다. 그곳을 방문하러 온 수단 주재 미국 대리대사의 차량도 입장을 좀 자세히 묘사하고 싶습니다. 대중이 스스로 자기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의 분위기를 힘껏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4월 11일, 30년 동안 수단을 지배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퇴진했습니다. 군부는 알바시르에게 당선을 지킬 수 없다, 체제의 나머지를 살리려면 당신을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쟁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연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묘사하고 싶습니다. 대중이 스스로 자기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의 분위기를 힘껏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차르를 타도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상주의에 도취된 단명한 1871년 파

그들의 머리 위로 장막을 들어서 햇빛을 가려 준다.

"통치자 따위 없이도 이 젊은이들은 농성장을, 이 작은 '국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싸움과 시비를 걸지 않고 의젓하게 그러고 있다. 웃음, 협력, 단결, 연대가 이곳의 질서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당시 수단은 노동계급이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자 평의회 같은 기구가 사회를 운영하지도 않았습다. 그럼에도 이런 광경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단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단은 노동조합 운동의 중심지인 아트바라시(市) 철도 노동자들은 아프리카 최초로 운송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르툼 광장을 지키려 농성에 합류하려 온 사람들을 이 노동자들이 기차로 실어 날랐습니다.

5월 28일 수단 전역에서 멋진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 80~90퍼센트가 참가했습니다. 하르툼 북부의 발전소 노동자들이 발전소 앞에 모여 안전도를 벗어 아랍어로 '민간 정부'라는 글자 모양으로 늘어놓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군부 독재에 신물이 났고, 노동자로서의 힘을 발휘해 군부를 몰아내겠다고 웅변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68년 프랑스의 놀라운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총파업

이 벌어졌을 때, 베를리에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벽에 붙은 '베를리에(Berliet)'라는 글자를 '리베르테(liberté)'[자유]로 고쳐 달았죠.

수단 지배계급은 총파업에 겁을 먹었습니다. 군부도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항쟁의 지도자 일부도 겁에 질렸습니다. 실제로 지도자가 없는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운동을 논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기존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상이 운동을 지배합니다.

운동이 더 나아갈 잠재력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지역마다 항쟁 위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평의회가 수립될 잠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단 항쟁 지도부는 총파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운동의 약한 모습을 눈치챈 군부는 항쟁을 진압할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는 군대의 이반을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군대 일부는 항쟁의 여러 국면에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이웃 나라를, 특히 이집트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반동적 통치자들을 만나 항쟁을 잔혹하게 진압해도 지지해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마침내 6월 3일 수단 군부는 [군부 직속 무장 조직인] 신속지원군을 투입해 하르툼 광장을 점거한 시위대를 살해했습니다. 최소 150명이 신속지원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지배 질서가 위협받으면 지배계급이 민주주의적 외양을 겹쳐치우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200년 전 영국 맨체스터 성 피터 광장에 모여 의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지배자들이 학살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1973년 칠레 지배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위협한 노동자 운동을 분쇄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30년 전 중국 지배계급이 자신들을 몰아낼지도 모르는 운동에 직면해 탄민단 광장에서 학살을 자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학살한 것은] 수단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지배계급은 자기 지배를 위협하면 그렇게 대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런 가혹한 탄압에도 수단 항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파업이 계속 벌어지고, 거리 시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력이 없었던 운동 지도부는 군부와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갔고, 사실상 몇 년 동안 군부에 권력을 주는 합의안에 조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수단에서 나타난 문제가 전 세계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때도 수단에서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제1차세계대전의 전선에서 사람들이 죽고 본국에서 빈곤이 만연한 현실에 맞서 반란이었습니다.

수단인들이 알바시르를 끌어내린 것처럼 러시아인들도 1917년 2월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힘으로 차르[황제]를 권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때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최선이다’, ‘너무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된다’, ‘너무 멀리 가지 말자’ 같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차르를 끌어내린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다수가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러시아에는 수단과 달리 볼셰비키라는 혁명적 조직이 있었습니다. 볼셰비키는 수십 년 전부터 노동계급 내에 뿌리내리고, 각종 노동계급 투쟁,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에 개입하고 참여하면서 노동계급 안에서 자신들의 정치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볼셰비키는, 차르 몰락 이후 집권한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말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즉각 끝내고, 농민들은 토지를, 노동자들은 공장을 접수하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볼셰비키는 노동자 평의회(의 성장을 지지했습니다. 노동자 평의회는 노동자의 대표자들이 자기 작업장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볼셰비키는 이러한 노동자 평의회, 즉 소비에트가 러시아의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지배자들이 피바다를



사진5 (위) 그리스 총파업

사진6 (아래 왼쪽) 영국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



사진7 (아래 오른쪽) 그리스 전 총리 치프라스

만들어서 혁명을 끝장내려 했지만, 그 결과는 6월 3일 수단 하르툼 광장과 달랐습니다. 노동자들은 코르넬로프 장군의 쿠데타 시도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반격했으며, 혁명가들이 총살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볼셰비키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농민의 지지를 이끌어

낸 러시아 노동자들이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급이 항쟁에서 승리하는 데에서 볼셰비키는 전체 노동계급과 구분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단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혁명가들의 소규모 단체들은 있지만, 항쟁의 방향을 좌우하기

에는 너무 작고 취약하고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그리스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저희 자매 단체 동지들을 비롯한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있었고, 이들은 계급투쟁 수위를 높이려 분투했으며, 시리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손놓고 기다려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

토론 정리

발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난민 분들을 대표해 발언하신 이집트 동지에게 환영의 뜻을 보냅니다.

어떤 분께서 자신이 다니는 공장이 머지않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도 무시무시한 통계가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 최소 12기의 핵발전소가 일부 혹은 완전히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어떤 난리가 날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한 동지께서 수단 항쟁에서 여성들이 한 [적극적인] 구실에 관해 발언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수단 항쟁이 부족 간 장벽도 극복했다는 사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특히 수단 서부 다르푸르가 그 사례입니다. 알바시르 정권 당시 다르푸르에서는 내전이 벌어져 [종족 간 갈등으로] 20~3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번에 항쟁이 시작되자 알바시르는 다르푸르 사태를 이용해 항쟁을 폭력적이라고 매도하고 탄압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단 운동은 다르푸르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다르푸르인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 줍니다.

한 동지께서 1917년에 볼셰비키의 성장에 관해 질문하셨죠. 수치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1917년 3월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도시인 페트로그라드에서 볼셰비키 당원 수는 2000명이었습니다. 4월에는 그 숫자가 1만 6000명으로, 7월에는 3만 6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러시아의 방직 도시인 이바노보-보즈네센스크에서는 1917년 3월에 볼셰비키 당원이 단 1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4월에는 10명이 3500명으로 늘었고, 7월에는 540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조직적 활동이 중요했습니다. 주변 노동자들에게 신문을 판매하고, 작업장에서 모임을 열었던 덕분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치적 역량이었습니다. 그런 역량 덕분에 볼셰비키는 혁명 전부터 모든 투쟁에 개입하고, 1917년 혁명이 진행될 때에는 전쟁에 반대하고, 임시정부를 넘어서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자고 주장하는 올바른 정치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작업장으로 달려가 “동지들, 내일부터 혁명을 일으킵시다” 하고 외치는 식으로는 혁명을 준비하지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다지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혁명을 준비하려면 혁명의 정수에 담긴 논리를 오늘날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녹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아니라 노동자 평의회를 원합니다. 노동자 평의회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모든 쟁점에 대해 ‘거리와 작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 선거나 투표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혁명

어떤 동지께서 혁명적 위기가 오려면 전쟁이나 그 비슷한 사회적 혼란이 있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이 제대로 한판 붙는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후대에 물려줄 세상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레닌은 혁명이 일어날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었고, 트로츠키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레닌이 말한 두 조건은 ① 지배계급이 기존 방식으로 더 지배할

수 없을 때, ② 노동계급이 기존 방식으로 더 살기를 거부할 때입니다. 트로츠키는 혁명적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죠.

레닌이 제시한 조건은 결국 위기를 뜻하지만, 위기는 여러 형태일 수 있습니다. 수단에서 그 위기는 장기 집권으로 오랫동안 불만이 쌓인 독재 정권의 위기였습니다. 2011년 이집트에서는 그 위기는 무바라크 정권의 위기였습니다. 둘 모두 전쟁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례 모두 국제적 사태 전개の影響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이유로 국제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은 국제 혁명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주의를 주장합니다. 수단 항쟁도 알제리 항쟁에서 큰 용기를 얻었고, 이집트 혁명은 직전에 일어난 튀니지 혁명과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단 항쟁의 정치적 약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리스에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둘 모두 중대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그 고비는 국민투표였고, 수단에서 그 고

다. 그러나 이들도 사태를 바꾸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이 조직돼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수많은 한국 노동자들도 수단인들처럼 항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가서 ‘우리도 조직을 만들어야겠네’ 하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보여 드린 사진들을 보십시오. 민중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우리 앞에 놓인 분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노동자를 가르는 분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분열의 장벽은 투쟁 속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단결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빈곤, 전쟁, 긴축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기후변화가 단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국가로 나뉜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는 세계에서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억만장자 43명이 못사는 세계 인구 절반과 같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3명이 아니라 26명이 못사는 세계 인구 절반과 같은 부를 소유합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승리로 이끌 조직을 갖춰야만, 자본주의에 도전할 만큼 큰 투쟁이 다시 벌어졌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는 하르툼 광장 학살이었습니다.

수단 항쟁 지도부와 그리스의 시리자 모두 기존 방식을 버리고 뭔가 다른, 혁명적 정치로 나아가야 태세가 돼 있느냐는 정치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둘 모두 기존 체제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시리자는 유럽연합 자본가들과, 수단 항쟁 지도부는 군부와 기존 체제 내에서 협상하는 길을 고집했으며, 결국 상대의 저항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차별과 착취에 반대하고, 그리스와 수단에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조직을 지금부터 건설해야 합니다.

강연 도중 좋은 동지의 심정, 심분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조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겁니다.[좌중 웃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혁명가가 돼야 합니다. 모두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미몽에서 깨어나 우리 앞에 놓인 가능성에 눈뜨고 혁명적 조직을 건설할 필요성에 눈떠야 합니다.

그러니 지난 며칠 동안 ‘맑시즘2019’에서 토론을 즐기신 동지들은 모두 노동자연대에 가입해 혁명으로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통역 천경록 녹취 한가은·박소연 정리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볼리비아 쿠데타 —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 왔지만, 볼리비아 우파 쿠데타는 지금껏 가장 나쁜 소식이다.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쿠데타에 밀려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했다.

한심한 주장이 제기됐고 심지어 좌파 일각에서도 공유하는데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과연 쿠데타냐는 것이다.

모랄레스는 선거 개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파적 상대 후보 카를로스 메사와의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모랄레스 반대파 측이 폭력 시위를 키우자, 모랄레스는 한 발 물러서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메사는 이 제안을 거절하며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어 경찰이 파업을 벌였고, 공군 참모총장은 모랄레스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1960~70년대 쿠데타로 라틴아메리카가 피로 물든 것 같은 일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는 분명 쿠데타다.

현 상황은 특히 비극적인데 2003~2005년 당시 볼리비아는 중도 좌파 정부 집권 물결인 “핑크 물결”의 배경이 됐던 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쿠데타 반대 운동 지배계급의 복수에 저항하고 있다

21세기 초 중도 좌파 정부들이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집권했다. 이는 1970년대 초 이래 사회의 압도 다수를 궁핍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표현이었다.

볼리비아에서 이런 흐름은 대규모 항쟁이 거듭 벌어지는 방식으로 표현됐다. 2000년에 수도 민영화에 맞서 코차밤바에서 벌어진 “물 전쟁”을 시작으로, 2003년 10월에는 천연가스 민영화에 맞서 “가스 전쟁”이 벌어졌다. 이 항쟁으로 당시 대통령 곤살로 산체스 드 로사다가 퇴진했다.

마침내 2005년 5~6월에 벌어진 제2차 “가스 전쟁”으로 산체스 드 로사다의 부통령 출신 후임 대통령도 권좌에서 끌어내려졌다. 바로 그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도전했던] 카를로스 메사였다.

수도 라파스 인근 노동계급 도시 엘알토는 두 차례 “가스 전쟁”의 중심지였다. 엘알토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대규모 집회, 총파업, 핵심 교통로 봉쇄는 대통령 두 명을 퇴진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모랄레스가 이끄는 사회주의운동당

(MAS)의 2005년 12월 대선 승리는 이런 거대한 투쟁이 선거 결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진실은, 집권한 모랄레스와 사회주의운동당은 이 엄청난 운동으로 분출한 염원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빈곤을 완화시키긴 했지만, 정부의 목표는 제한적이었다.

부통령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는 볼리비아에서 사회주의는 당면 과제가 아니고 “안데스-아마존 식 자본주의”가 목표라고 썼다.

마르크스주의 논평가 제프리 웨버는, 집권한 사회주의운동당은 볼리비아 동부 산타크루즈주(州)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농업 자본을 구축하는데 국가 권력을 주되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반대 항쟁에서 적잖은 구실을 한] 농민운동은 이런 국가와 자본의 동맹에 종속됐다.

이런 자기제한 때문에 쿠데타 위험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가르시아 리네라는 이렇게 썼다. “볼리비아에서 사회적 계급은 인종적 계층의 형태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볼리비아 사회에는 식민지적 분단선이라 할 만한 것이 그어져 있어 원주민 출신자들은 백인 내지는 백인 혼혈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비해 천대받는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었다. 모랄레

스 정부는 2010년 개헌으로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켰는데,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규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약속하는 이 법은 ‘어머니 지구’를 신성시하는 원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그러나 모랄레스가 비틀거리자, 우파는 원주민·노동자·농민들(인적 구성이 상당히 겹친다)이 이룩한 전진을 되돌리겠다고 나섰다. 이는 사회주의운동당 집권을 가능케 했던 대중운동을 꺾겠다는 것이 아니다. 계급적·인종차별적 복수에 나선 것이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헤아니네 아네스 차베스의 악명 높은 트윗에서 이를 뚜렷이 볼 수 있다. 아네스는 이렇게 썼다. “원주민들의 악마 숭배 의식이 사라진 볼리비아를 소망한다.”

16세기에 안데스 산맥을 식민 점령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이 원주민 집단을 파멸시킬 때 했던 말과 똑같다.

브라질의 강경 우파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베네수엘라 우파 쿠데타 세력들도 이와 같은 인종차별적 계급적대를 품고 있다.

모랄레스와 가르시아 리네라는 전선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애초에 이들을 권좌에 올렸던 대중운동이 다시 단결하고 힘을 되찾아 쿠데타를 분쇄하기를 바라자.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81호 / 번역 김준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나토 뇌사 상태” 비난이 드러낸 것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뇌사 상태”며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의 수장이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를 조롱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종결 이래로 유럽의 만만찮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결집시키고, 군사 강대국인 소련(붕괴 이후에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견제하는 전략을 택해 왔다. 나토와 유럽연합은 그런 제국주의 전략의 핵심 기구이고 유럽 각국은 나토에 군사력을 의존해 왔다.

마크롱의 발언에 미국 지배자들은 즉각 발끈했다. 유럽연합의 또 다른 핵심 국가인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마크롱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빨리 밝혔다. 반면 러시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이런 소동의 이면에는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 약화가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유럽 지배자들은 미국에 불만이 쌓여 왔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터키의 쿠르드 공격을 용인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언짢지 않은 것, 유럽을 러시아 위협에 노출시킬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을 파기,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도 추가로 매기겠다고 특하면 협박하는 것, 자신들이 공들였던 이란과의 핵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것, 트럼프가 유럽연합 존재 자체를 대놓고 비난하는 것 등등.

그러나 미국을 향한 유럽 지배자들의 불만이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은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개입해 미국·유럽연합의 영향력을 허물자 유럽 지배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 오바마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유럽 지배자들은 제국주의 세계 분할에서 뒤쳐지지 않으려 하고 일부는 이를 위해 독자적인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군사력은 모두 합해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와 견줘도 한참 떨어진다. 유럽 지배자들이 군대를 갖추는 데 당장 박차를 가하더라도 앞으로 오랫동안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군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뒤야 하는지를 놓고서

도 유럽 지배자들 안에서 의견 통일이 쉽지 않다. 유럽에 위협적인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다. 중동에 개입하거나 중국 제국주의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래서 유럽 지배자들은 2017년에 유럽방위기금을 만들고, 유럽 국가들만의 군사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지만 독자적인 군대 결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이런 갈등은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이 약해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 제국주의를 견제하려고 전략적 우선순위와 자원을 아시아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은 유럽 제국주의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갈등을 조율할 능력은 예전만 못하다.

이처럼 미국은 제국주의 패권이 전과 같지 않아 중동 등지에서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중국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만큼은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전략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에 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

김중환



사진 출처 Vivian Morales C.



칠레

계속되는 시위·총파업에
꼼수 내미는 지배자들

칠레에서 시위가 계속 되는 가운데, 대통령 피네라가 이끄는 정부는 운동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12일에는 거대한 총파업(사진)이 벌어졌는데 보건 노동자, 교사, 일부 광원 등이 참가했다. 수십만 명이 전국에서 행진했다.

15일 국회는 내년 4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도 이를 지지했다. 현재의

헌법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만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위대는 헌법과 다른 주요 사안들을 검토할 기구는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풀뿌리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81호

번역 김중환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정진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합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로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 탄압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한통속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주요 국가기구가 보수적 성관념의 잣대로 교사 노동자를 공격하는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해당 교사가 제기한 광주시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 절차 위반 문제를 전혀 묻지 않았다. 그야말로 요식절차였던 것이다.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교사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을 교육부는 완전히 무시했다. 대신 수업 내용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배이상헌 교사로서는 당혹스럽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심사 과정이었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정경희 장학사는 교육부 소청심사에 나와서, “[신고] 학생들이 교사를 성도착증 환자 같다고 한다”며 진실이 검증되지도 않은 말을 하며 배이상헌 교사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교육청 관료들은 ‘학생 보호’ 운운하지만, 교육의 진정한 결핍물은 이들 관료들의 지독히 보수적인 성 관념과 권위주의임이 뚜렷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성인식개선팀은 여성 차별

에 반대하는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야동’ 취급해 왔다. 장휘국 교육감도 배이상헌 교사가 “더러운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의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이유로 성인지교육용 영화를 음란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 성적 보수주의를 부추기며 청소년들에게 절실한 성교육을 가로막을 뿐이다.

한통속

단지 광주시교육청 같은 몇몇 교육청만이 아니라 교육부의 스쿨미투 대책 자체가 모순에 차 있다.

교육부의 스쿨미투 대책은 실질적 개선책이 없이 성범죄에 대한 공분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을 위험을 안고 있다. 올해 2월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개념을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객관적 실재나 맥락과 무관하게 개인이 ‘수치심이나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성희롱’으로 규정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매뉴얼대로 했다”며 둘러댔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교육부 매뉴얼에 들어 있는 것이다.(물론 애초에 부당한 판단을 내린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이런 면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교육부는 교사가 법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내세워 징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일들은 스쿨미투의 정당한 취지를 왜곡하며 교육당국이 부당한 조



문리하 기자 사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배이상헌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11월 15일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11월 15일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전국도덕교사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치를 내리고서도 손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 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성평등’을 얘기하며 실질적인 개혁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유은혜도 마찬가지다. 스쿨미투 이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약속했지만 교육부의 대책은 생색내기나 다름없었다. 포괄적 성교육 시행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왔고, 여성·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는 학교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기는커녕 개정조차 하지 않았다. 학교 성교육표준안 개정을 약속하고서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에 이런 배신과 위선이 가득차 있다. 유은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 적폐를 계승해 왔다.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처분 취소를 한사코 회피해 왔고,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를 보호하며 교육 불평등을 유지해 왔다.

조국 사태로 인한 대중의 불만을 달

래고자 다시 교육 개혁 제스처를 취하지만 수시/정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요구도 뻔뻔스레 외면하고 있다.

국가기구의 부당한 탄압에 맞선 배이상헌 교사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성평등교육과 교육 노동자의 조건과 권리가 걸린 싸움이다.

성평등 교육을 방해하는 교육부의 결정이 나온 전날,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는 “성평등과 학문의 자유를 토대”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의 직위해제 유지 결정이 나왔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이상헌 교사를 지지하고 있다. 교육부 결정 바로 다음날,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가해 배이상헌 교사 탄압의 부당성에 공감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더는 회피하지 말고 조합원 방어에 나서야 한다.

대광여고 무혐의 교사 중징계 철회하라

배이상헌 교사의 소청 심사 당일,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피해를 입은 광주 대광여고 교사 3명의 소청도 기각했다.

이들 교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고도 교육청의 요구로 해임됐다(본지 관련 기사: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수사기관이 학생들을 조사하고 시민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어 조사한 뒤 나온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에 이어 가뿐히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무혐의 교사 중징계는 억울한 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판로적 책임 회피일 뿐이다. 광주시교육청과 대광여고는 터무니없는 해임 조치를 철회하라.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양효영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신체적 특질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성소수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려 온 인권위의 행보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별을 남·녀 양성만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특히 트랜스젠더 차별적이다. 최근 인권위가 남녀 외 제3의 성도 인정하겠다는 진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겨냥한 반

동인 듯하다.

애초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의원 32명을 비롯해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0명이 동참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이 제기되자 11월 19일 뒤늦게 개정안 발의 참여를 철회했다). 2017년에도 김태흠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거의 똑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차별

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는 자유한국당 기독교회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악명 높은 보수 개신교계 반(反)동성애 운동가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적잖은 이들이 보수 개신교계와 협력하며 동성애 혐오를 부추겨 온 자들이다. 총

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지역구의 보수 개신교계의 표를 얻어보려는 심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곧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도 개정안 발의로 보수 개신교계의 환심을 사려 한다.

반동성애 단체들이 모인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개정안을 환영했다. 또한 인권위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궁극에는 ‘여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형 보수 교회 목사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는 자들이 여성 권익 운운하니 위선적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생물학적 여성의 권익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관련 기사: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는 대

립하는가?’, <노동자 연대> 224호)

반동성애 단체들이 말하는 “건전한” 동성애 반대 행위란 에이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성소수자 행진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거짓으로 혐오감을 부추기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가로막으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이다.

보수 개신교 목사들의 반동성애 주장과 달리,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 해석이 단일한 것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관련 기사: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노동자 연대> 174호)

최근 한국에서도 예장통합 이단대책위 전문위원까지 역임한 노 신학자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책 《동성애는 죄인가》(허호익 지음, 동연)를 써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개신교 교회 내에서 동성애 포

용 입장이 만만찮은 소수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평신도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주요 사회 현안 개신교인 인식 조사’(한국기독교교회전문제연구원)를 보면,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약 23퍼센트가 반대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0퍼센트는 ‘예수라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평균적인 인식에 견줘 개신교 교회는 여전히 동성애에 보수적이지만, 위 사례들은 동성애 혐오 선동이 개신교인 일반을 대변하는 게 아님을 보여 준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조항을 흡집내려는 인권위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 관련 기사 4편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이 글은 1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을 현 시점에 맞게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1일 주 52시간제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위반시 처벌을 6개월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을 지연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상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여러 편법과 조건 후퇴 등으로 주 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 기간을 준 것이었다.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들에게 탄력근로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뒷받침 속에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확대, 근태관리 강화와 현장 통제, 업체 쪼개기 등을 시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52시간제 법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크게 넓혀겠다는 것이다.(내년 1월 시행)

그동안 현행법은 자연재난 등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왔다. 정부는 이 예외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근로 연장의 적용 범위를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비록 시행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지만, 현 정부의 기조와 개악 취지에 비춰 볼 때, 노동시간 연장의 제약 장치가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바뀌면,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므로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 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셋째,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정부 발표가 부족하다면서, 특별연장근로가 여전히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불멘 소리를 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개악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더 확실한 개악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도 이런 재계의 요구에 힘을 실으며 ‘더 개악’을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강화하며 우경화할수록 재계와 우파의 기만 더욱 살려 주는 것이다.

안 그래도 노동부는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

다. 문재인은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시 한 번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을 강조했다.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의 논의도 한창이다. 여야가 이달 중 열기로 합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민영화와 각종 규제 완화를 담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노동개악 문제에서는 개악 수준을 놓고 여야 간 협상 중이다. 정부·여당이 한국당의 ‘더 개악’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탄력근로제 개악에 더해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수용했고, 선택근로제 확대도 협상 의제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에 더해 법 개악을 제촉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개악 입법을 실제 저지하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총파업을 명령하고 시행해야 한다.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려 임금과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공격이다. 일자리 확대에도 불리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개악 촉구는 상대적으로 ‘만만한’ 무노조·미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조직 노동자들도 겨누고 있다. 금속노조 등 유노조·대기업 노동자들이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다.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만여 명이 참가해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국노총 집회에도 1만여 명이 모였다. 노동개악에 대한 반감과 저항 의지가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성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후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2019년 3월 30일 개정



철도 임금·조건 개선하라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정원

철도 노동자들이 11월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KTX 운행률이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의 경우 3대 가운데 2대는 멈춰 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내와 고양-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차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4600여 명)이다. 또, SRT와 KTX 통합,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노조의 4대 요구에 정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난색이다. 임금은 고작 1.8퍼센트 인상한다면서 연차보상비 일부를 무급화 하고 수당을 삭감하겠다는 안을 내놔다. 사실상 임금 인상은 거의 없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개악안을 들이밀며 미래 임금도 공격하고 있다.

인력 충원은 요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865명을 증원안을 내놔다. 그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철도에 수익성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1월 20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 출정식

것도 사업소 통제할, 외주화를 통한 대규모 전환배치, 변형근로제 도입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등과 한 세트로 말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바꾸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과 인력 충원 요구에 완강하게 반대하며 철도공사 사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실 공공기관 경영진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 없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만만찮은 투쟁의 압력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건비 증액을 수반

하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금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조치를 강행하고 연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개악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9일 노동자들이 “철도공사의 경영 상태와 정부

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 줘야 한다며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전체 공기업 중 초과 노동과 산재 발생 1위’일 정도로 나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이런 현실은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도대체 정부는 누구더러 사정을 봐주라는 말인가?

역대 정부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철도 정원을 대폭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하고 인력 충원을 억제해 온 탓에 철도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밀양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부는 “철도공사 적자”, “재정 여건” 운운하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에 수익성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더구나 수서발 KTX(SRT)를 철도공사에서 떼어내 분할 민영화 한 것이 지금 철도공사의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철도 안전을 뒀 전으로 밀어내는 문재인 정부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역대 정부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으로 임금·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임금·조건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분명히 해야

노동시간 단축은 철도 노동자들의 오랜 바람이다. 4조2교대제로의 전환은 야간 노동을 줄이므로 안전에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충원, 임금 보전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철도 파업이 시작되자 〈한겨레〉 신문은 사실에서 “정부와 노사의 유연한 자세”를 촉구했다. 즉, 사측이 제안한 ‘인력 충원 최소화 + 노동조건 개악(역무 인력 축소와 외주화, 사업소 통제합, 변형근로, 노

동강도 강화 등)’ 방안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에서 협상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가 오히려 사라진다.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도 고강도 노동에 노출이 돼 퇴근 후 다음날 노동을 위해 휴식하는 것 말고는 여가를 즐길 수도 없다. 외주화가 확대되면 열악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결국 정규직의 노동조건도

악화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무체계 개편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인력이 충분히 늘어야 한다. 사측이 제시한 각종 개악안, 노동강도 강화 시도에 반대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 삭감도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가뜰이나 임금이 억제돼 불만이 높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이 삭감되면, 노동자들은 부

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다시 초과노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연월차를 쓰거나 병가를 내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고, 휴일 대체근무를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 지도부는 불가피하지 않은 후퇴를 단호히 반대하고, 임금·노동조건 악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만큼, 온 힘을 다해 싸워 정부와 철도공사를 압박해야 양보를 얻을 수 있다.

파업 파괴자(대체인력) 투입 반대해야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문재인 정부는 군 인력을 포함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파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파업권을 억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이용해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발을 묶어 놓았다. 또, 이것도 모자라 군 인력을 동원해 대체인력까지 투입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과 2016년 철도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했던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설비·장비 등을 중단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철도 파업은 전면화되지만 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을 마비시키는 것을 통해 정부를 크게 압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파괴하려 한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열차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는 없지만, 파업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는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때는 철도노조의 일부 지부들이 대체인력

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물론, 아쉽게도 당시 노조 집행부가 노조 전체 차원으로 이를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저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대체인력 저지는 이미 1백 년 전부터 국제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대체인력을 저지하고,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파업 대열 이탈을 막기 위한 활동인 ‘피켓팅’을 발전시켜온 전통이 있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피켓라인은 파업의 경제적 효과를 진정으로 높이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철도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처우개선 합의 이행하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뻔뻔스럽게도 철도공사 사측은 자신들이 합의한 사항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제자리고, 그조차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거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실제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나선 만큼,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직접고용·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 연대해야 한다.

또, 철도공사가 정규직 인력 충원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업무 외주화를 확대하려 하는데, 함께 싸워 외주화 확대를 막고 자회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이롭다.